

산업생태계의 강건성 제고를 위한
스텝업(Step-up)방식의 CSV형 상생협력 평가모델 정책제안
- 현행 동반성장지수의 대안모델 -

2014.8

목 차

I. 최근 3년간 동반성장 추진성과 평가	5
II. 한국경제 대도약 위한 새로운 동반성장 패러다임의 필요성	6
1. 한국경제 성장의 새로운 모멘텀 필요	6
2. 신성장동력 창출 촉진을 위한 동반성장 추진방향	7
III. 현행 동반성장지수의 한계점과 대안모델 제안 배경	8
1. 현행 동반성장지수의 한계점	8
2. 공유가치창조형(CSV) 상생협력 평가모델 제안배경 및 연구경과	10
IV. 스텝업(Step-up) 방식의 csv형 상생협력 평가모델 정책제안	12
1.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평가부문 개선방안	12
2. 중소기업체감도 평가부문 개선방안	17
3. 동반성장지수 인센티브 체계 개선방안	20
4. 동반성장지수 시행효과 검증방안	23
V. 향후 추진계획	25

- 본 자료는 상생협력연구회의 「CSV형 상생협력모델 연구」를 토대로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사업팀이 작성한 것입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2-3771-0492 FAX : 02-3771-0143 E-mail : hsw@fkilsc.or.kr

I. 최근 3년간 동반성장 추진성과 평가

- 지난 3년간(2010. 12, 동반성장위원회 출범) 주요 대기업의 동반성장 추진성과 평가척도로 동반성장지수(이하 ‘지수’)가 시행됨에 따라 동반성장 문화와 인식이 확산
 - 지수평가 대상기업은 2011년 56개사에서 2014년 134개사로 확대되고, 동반성장 추진 영역이 제조업에서 비제조업, 공기업, 지자체 등으로 확산
 - 국민의 10명 중 9명(88.1%)이 “한국경제의 지속성장 위해 동반성장이 중요하다”고 인식
 - 200대 기업 중 동반성장 전담조직 설치가 42.6%(2010년) 에서 75.8%(2013년)로 1.8배, 같은 기간 인사평가 시 동반성장실적을 반영하는 기업은 20.0%에서 68.5%로 3.4배 증가
- 기술유용, 부당감액 등에 징벌배상제, 납품단가 협상권이 도입되는 등 하도급 공정거래 제도가 정비되고, 주요 대기업의 동반성장 실천으로 하도급 공정거래 이행수준이 향상
 - 30대 그룹의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 위반건수는 55건(2011년)에서 34건(2013년)으로 38.2% 감소되고, 대기업 하도급 공정거래 이행수준에 1차 협력사의 71%가 ‘더 좋아졌다’고 평가(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조사, 2014.3)
 - 한국 500대 기업은 주요국(美·日·獨) 기업보다 협력사에 납품대금은 2배 빨리 주고(26.5일 vs 50.5일), 원자재가격이 오를 때 납품단가에 22.1%p 더 반영(85.8% vs 63.7%)해 줌
-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개선을 위한 30대 그룹의 협력사 지원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동반성장 및 하도급 공정거래에 대한 1차 협력사의 체감도 개선
 - 30대 그룹의 협력사 지원실적은 8,922억원(2010년)에서 1조 5,942억원(2013년)으로 1.8배(2014년은 1조 7,161억원) 증가했고, 동기간 누계 지원실적이 5조 5,791억원임
 - 지난 1년간 1차 협력사의 69.2%는 대기업의 동반성장 추진노력이 ‘더 좋아졌다’고 평가했고, 70.6%는 대기업의 하도급 공정거래 이행수준이 ‘더 좋아졌다’고 체감
- 이에 따라, 성과공유 도입기업 확대 등 동반성장 우수사례 창출이 확대되고 있음
 - ‘산업부-주요 대기업 성과공유 자율추진 협약’(2012.6) 이후, 성과공유 도입기업은 28사(2012년) 에서 72사(2014년) 로 2.6배 늘고, 과제당 평균 5억 1,554만원의 재무성과 창출

성과공유 우수사례 GS건설과 일양토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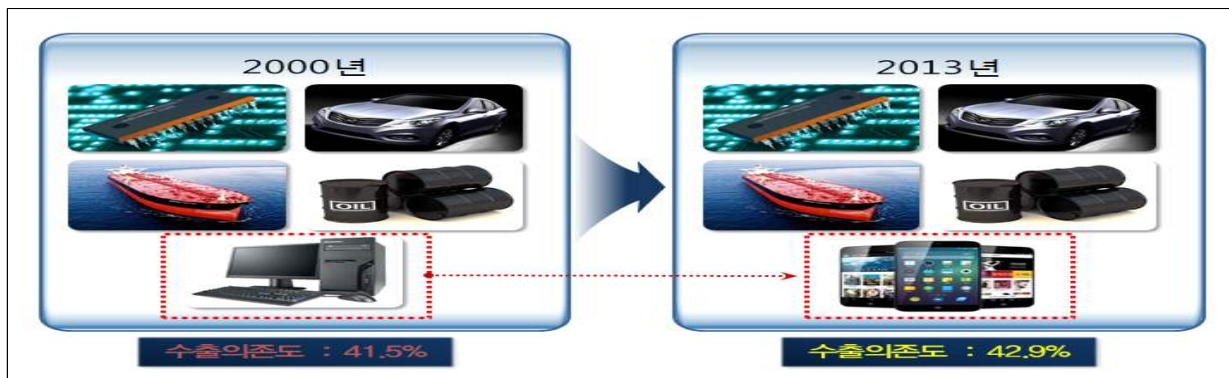
- ▶(배경) GS건설은 지하철 2호선의 하부로 지나가는 9호선 터널 굴착 시 난공사로 공사기일과 원가를 맞추기 어려워짐
- ▶(내용) GS건설 기술본부와 현장의 전문인력이 협력사인 일양토건과 함께 신공법 공동개발을 추진
- ▶(효과) GS건설은 신공법인 가교형 받침공법 개발에 성공하여 공사현장에 적용한 결과, 8개월 공기 단축과 관련공사 원가가 약 40%(7억 원) 절감. 양사는 공동특허를 출원했고, 사업참여의 우선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양해각서 체결

Ⅱ . 한국경제 대도약 위한 새로운 동반성장 패러다임의 필요성

1. 한국경제 성장의 새로운 모멘텀 필요

- 글로벌 경쟁체제의 심화로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률과 1인당 국민소득, 기업성장이 정체되어 우리경제의 성장엔진이 식어가지 않을까 우려됨
 - 2011년 이후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는 직전분기 대비 경제성장률이 0%대에 머물고, 1인당 국민소득도 7년째 2만 달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함
 - 기업성장도 정체되어 지난 10년간(2004~2014) 포춘지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 중 중국기업은 15개사에서 95개사로 6배 이상 늘어났으나, 한국은 11개사에서 17개사로 6개사 증가
- 이는 70~80년대 우리경제의 고속성장을 선도한 철강, 자동차, 전자제품 등 기존 주력산업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해 성장잠재력이 크게 둔화한데서 비롯
 - 2013년 반도체·자동차·조선·석유화학·무선통신기 등 5대 수출품목의존도가 42.9%(2000년 41.5%)로 여전히 주력산업이며, IT·BT 등 차세대 기술·지식집약산업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국제수준 보다 낮음
 - 한국 IT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지수는 세계 3위(2007년) 에서 19위(2011년)로 크게 하락했고, GDP에서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59.2%로 19개 국민소득 4만 달러 국가중 16위 수준

<그림 1> 한국의 5대 수출품목 변화(2000년 → 2013년)



- 한국경제가 성장정체의 긴 터널을 벗어나 대도약(Quantum Jump)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으로 역할해야 하나, 이들의 혁신역량 취약
 -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나, 기술·생산성 등 혁신역량이 취약하여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총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42.9%에서 2012년 18.7%로 절반 이상 낮아졌고,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은 세계 최고 기술(100)의 76.6% 수준

2. 신성장동력 창출 촉진을 위한 동반성장 추진방향

- 한국경제의 대도약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진취적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고, 생산적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새로운 성장모멘텀을 찾는 방향으로 동반성장 확산여건 조성이 필요
 -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통해 대·중소기업 모두의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Win-Win)이 된다는 인식을 공유해야 동반성장 추진동력이 발생하며, 동반성장 문화가 확산됨
-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거나, 해외로 시장을 넓히는 등 기업의 자율성·창의성·도전성이 최대한 발휘되어 공유가치창출(CSV)이 촉진되도록 동반성장의 정책환경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함
 -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성·창의성·도전성이 발휘하도록 기업역량과 특성, 경영자원, 기업규모에 맞는 정책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
 - 동반성장의 파트너로서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에 역점을 두어 창의적 상생모델이 적용되어야 하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까지 문화가 확산될 때, 건강한 산업생태계가 구축 가능
 - 동반성장정책이 규제나 부담보다 기업의 진정성과 자발성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강화
 - 대기업은 진취적인 기업가정신으로 새로운 사업모델을 적극 발굴해 나가고, 협력사에 대해 신기술개발과 판로개척을 지원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해야 함
 - 또한, 성과공유를 확대하여 협력사가 성장동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2·3차 협력사의 경영혁신에 앞장서야 함
 -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지원과 정부보호에만 안주해서는 안되고, 부단한 경영혁신과 기술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해야 함
 - 특히, 대기업의 1차 협력사와 동반성장 효과가 생태계 전반으로 전파되기 위해서는 중견·중소기업 등 1·2·3차 협력사간 동반성장 기업문화 확산이 중요

III. 현행 동반성장지수의 한계점과 대안모델 제안배경

1. 현행 동반성장지수의 한계점

- 현행 동반성장지수는 기업규모, 경영역량, 업종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주요 대기업간 획일적인 상대평가구조로 설계되어 기업의 자발성과 창의성 발휘에 역부족
 - 지수 평가기업은 2012년 74개 기업에서 2014년 134개 기업으로 증가했으나, 비평가 대상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동반성장 추진수준에 상당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음
 - 동반성장 전담조직 구성 · 운용률{100대(90.9%) > 200대(75.8%) > 500대(32.3%)}. 인사평가지 동반성장 실적 반영률{100대(83.1%) > 200대(51.5%) > 500대(26.3%)}
 - 공정거래협약 평가방식의 기업만족도(100점 만점)는 59.5점에 불과했고, 중소기업 체감도 평가방식의 기업만족도는 47.8점으로 모두 낮은 수준
 - 협약 평가기준 불만족 사유: ‘협력사 자금지원 목표의 비현실성’(37.9%), ‘업종 특성과 맞지 않는 획일적인 평가기준’(34.5%), ‘일방적인 협약내용(기준 및 배점 등) 수용요구’(24.1%) 順
 - 체감도 평가결과 불신사유: ‘업종특성과 맞지 않는 획일적 평가기준’(41.67%), ‘응답내용의 사실여부 확인절차가 없어 체감도 왜곡 가능성’(34.50%), ‘체감도 조사대상 선정이 적합하지 못해 응답결과 불신’(16.66%) 順
- 현행 지수를 대기업외에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등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확산이 곤란
 - 지수 평가기업을 대기업에서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확대해야 산업생태계의 강건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현행 지수 평가기준은 주요 대기업도 이행하기 어려운 수준
 - 실제로, 2011년 지수 평가기업 56社の 경우, 자금지원에서 최고점수를 받으려면, 이들 기업 매출액의 0.6%인 3.6조원을 협력사에 지원 필요(이는 2009년 이들 기업들의 법인세의 6.8조원의 52.5%에 해당)
 - 또한, 상대평가방식의 현행 지수체계는 자금력과 조직규모가 큰 기업이 하위기업보다 상위평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하위기업들의 지수평가 참여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
- 현행 지수 이행부담은 큰 반면, 충분한 인센티브 미흡해 자발적 참여유인 저하
 - 현행 지수는 평가 대상 기업을 4개 등급으로 서열화하는 상대평가로 하위등급일 경우, 동반성장 부진기업으로 기업이미지가 훼손되는 반면, 인센티브는 평가

부담에 비해 실효성이 낮아 자발적 참여유인책으로 미흡

- 예컨대, 도소매·건설업종은 특성상 제조업종에 비해 R&D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정부의 R&D 관련사업 추진시 가점부여 등은 실효성이 거의 없음
- 지수 시행 이후 평가 대상기업과 이들의 1차 협력사들은 과도한 기업부담 가중, 동반성장효과 체감 곤란 등을 부정적 효과로 인식
- 지수평가 대상기업: ‘과도한 자금지원 및 등급서열화로 인한 기업부담 가중’(24.6%)을 가장 많이 꼽았고, 뒤를 이어 ‘대·중소기업간 협력시너지 저하’(13.2%), ‘중소기업의 자생력 약화’(2.8%) 順
- 1차 협력사: ‘동반성장 효과를 체감곤란’(19.0%)이 많고, ‘중소기업 자생력 약화’(7.4%), ‘과도한 자금지원 및 등급서열화로 기업부담 가중’(5.5%) 順으로 지적

□ 동반성장지수 시행목적은 기업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이나, 중소기업의 경쟁력 변화수준 등 지수의 시행효과에 대한 측정장치가 없어 정책효과 검증 곤란

- 대·중소기업 모두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 창출에 동반성장의 궁극적인 목표(Output)를 설정해야 하나, 현재는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과 3不 해소 등 대기업의 투입요소(Input)만 평가하여 지수 시행이후 정책목표 실현여부는 측정하지 않음
- 협력사의 R&D 투자액, 생산성 등 경쟁력 변화를 측정하고 취약점을 찾아, 동반성장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동반성장 평가기준과 운영방식의 보완 필요

□ 현행 중소기업 체감도 평가는 협력사 역량별 동반성장 투자수요가 반영되지 않아 대기업이 협력사를 지원할 때, 주력분야를 판단할 수 없음

- 본 센터 조사결과¹⁾, 협력사의 역량별로 기술개발, 운영자금, 판로개척 등 대기업에 대한 동반성장 투자수요가 각각 다르나, 현행 중소기업체감도 평가방식은 이를 반영 못함
- 범용기술업체(L형)는 하도급법 준수(47.1%), 구매윤리(21.4%), 공동개발·판로개척 등 생산적 상생협력(12.9%) 順으로 중시, 우선기술업체(A형)는 하도급법 준수(38.5%), 구매윤리(19.0%), 상생협력 추진체계(17.8%) 順으로 중시, 핵심기술업체(J형)는 금융지원(30.8%)과 생산적 상생협력(23.1%) 順으로 중시
- 동반성장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체감도 조사 시 협력사의 역량별 동반성장 투자수요를 반영하여 체감도를 산출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함

1) 조사대상 : 2013년 지수평가 대상기업 60개사(제조업종)의 1차 협력사 900개사 중 309개사 응답(응답률 34.3%)

2. 공유가치창조형(CSV) 상생협력 평가모델 제안배경 및 연구경과

- 주요 대기업과 이들의 1차 협력사 모두, 대·중소기업 간 상생발전을 위해 기업현실과 역량에 맞도록 현행 동반성장지수의 대안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식
 - 또한, 산업생태계 전반에 확산이 곤란하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유인이 부족한 현행 동반성장지수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대안모델 개발이 시급
- 본 센터 조사결과, 주요기업과 1차 협력사는 현행 동반성장지수의 대안모델로 각각 ‘기업의 경영자원과 역량에 맞는 모델’(37.7%, 22.9%)을 가장 높게 꼽음
 - 지수평가 대상기업들은 현행 동반성장지수의 대안모델로 ‘기업의 경영자원과 역량에 맞는 모델’(37.7%), ‘기업의 동반성장 수준별로 도입가능 모델’(30.2%),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에 대한 별도 측정장치 신설’(20.8%), ‘협력가치를 창출하는 CSV형 모델’(9.4%) 順으로 응답
 - 1차 협력사는 ‘기업의 경영자원과 역량에 맞는 모델(22.9%)’,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에 대한 별도 측정장치 신설’(18.8%), ‘시장점유율 확대 등 대·중소기업의 협력성과 반영 모델’(18.3%), ‘기업의 동반성장 수준별로 도입가능 모델’(15.4%) 順으로 응답
 - 현행 지수 평가방식 유지를 꼽는 대기업은 한 군데도 없었고, 1차 협력사는 2.4%에 그침 - 반면, ‘기업의 경영자원과 역량에 맞는 모델(37.7%, 22.9%)’과 ‘기업의 동반성장 수준별로 도입가능 모델(30.2%, 15.4%)’ 등 기업 현실과 역량에 부합하는 다양한 동반성장 모델개발 수요가 지수 평가기업과 1차 협력사가 각각 67.9%, 38.3%에 이름
- 아울러, 지수평가기업과 1차 협력사 모두, 자발적인 동반성장 참여 확산을 위한 동반성장 지수의 보완과제로 ‘기업현실과 업종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평가기준 마련’(46.2%, 32.8%), ‘우수기업에 실질적 인센티브 확충’(27.4%, 28.4%)을 가장 많이 꼽음
 - 뒤를 이어 지수평가 대상기업은 ‘하위기업에 평가결과 개별 통보로 자체개선 유도’ (11.3%), ‘CEO 경영철학과 기업문화 등 기업별 특징점이 발휘될 수 있는 분야 장려’(10.4%) 順으로 응답했고, 1차 협력사는 ‘중견·중소기업 참여 가능한 평가기준 마련’(19.8%), ‘하위기업에 평가결과 개별 통보로 자체 개선 유도’(10.4%)의 의견이 많음
- 이에, 본 센터는 상생협력연구회(회장 :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와 지수 대안모델 개발을 위한 ‘CSV형 상생협력모델 TF’를 발족
 - 2013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10개월간 상생협력연구회와 공정거래 협약 및 체감도에 대한 지수평가 대상기업의 의견 조사결과를 분석·반영하여 CSV형 상생협력 모델개발

- 연구 프로젝트 : 「스텝-업(Step-Up) 방식의 공정거래협약 평가모델(이성근 성신여대 교수)」, 「협력사 역량별 수요를 고려한 동반성장 체감도 평가방안(김수욱 서울대 교수)」, 「자발적 동반성장 참여 인센티브 제고방안(이종욱 서울여대 교수)」, 「동반성장지수 시행효과 검증 모형」(김기찬 가톨릭대 교수)의 4개 과제
- 2013년도 지수 평가기업 60개사(제조업)와 이들의 1차 협력사 900개사를 대상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지수 평가척도 및 인센티브 수요조사 추진(2014.1.29~3.20)

<표 1>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지수 평가척도 및 인센티브 수요조사 내용

조사영역	설문항목	조사영역	설문항목
공정거래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항목별 이행난이도 ✓ 공유가치창조(CSV) 적합도 ✓ 1~5단계별 평가기준 	협력사 체감도 모의테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기업 특성, 하도급 공정거래 ✓ 하도급 거래관행, 동반성장 추진체계 ✓ 경영지원 및 협력활동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인센티브 실효성 ✓ 신규 인센티브 수요도 ✓ 지수평가 참여 의향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인센티브 실효성 ✓ 신규 인센티브 수요도 ✓ 지수평가 참여 의향

- 올해 4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까지 동반성장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 동반성장지수를 기업규모와 협력사의 역량에 따라 5단계 절대평가 방식(Step-Up)으로 설계하고, 단계별로 인센티브를 높이는 동반성장지수의 대안모델 발표
- 현행 지수의 대안모델로 상생협력연구회가 제시한 CSV형 상생협력 평가모델은 기업 규모와 협력사의 역량에 따라 동반성장 이행레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이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5단계 스텝-업(Step-Up) 방식

<그림 2> CSV형 상생협력 평가모델의 기본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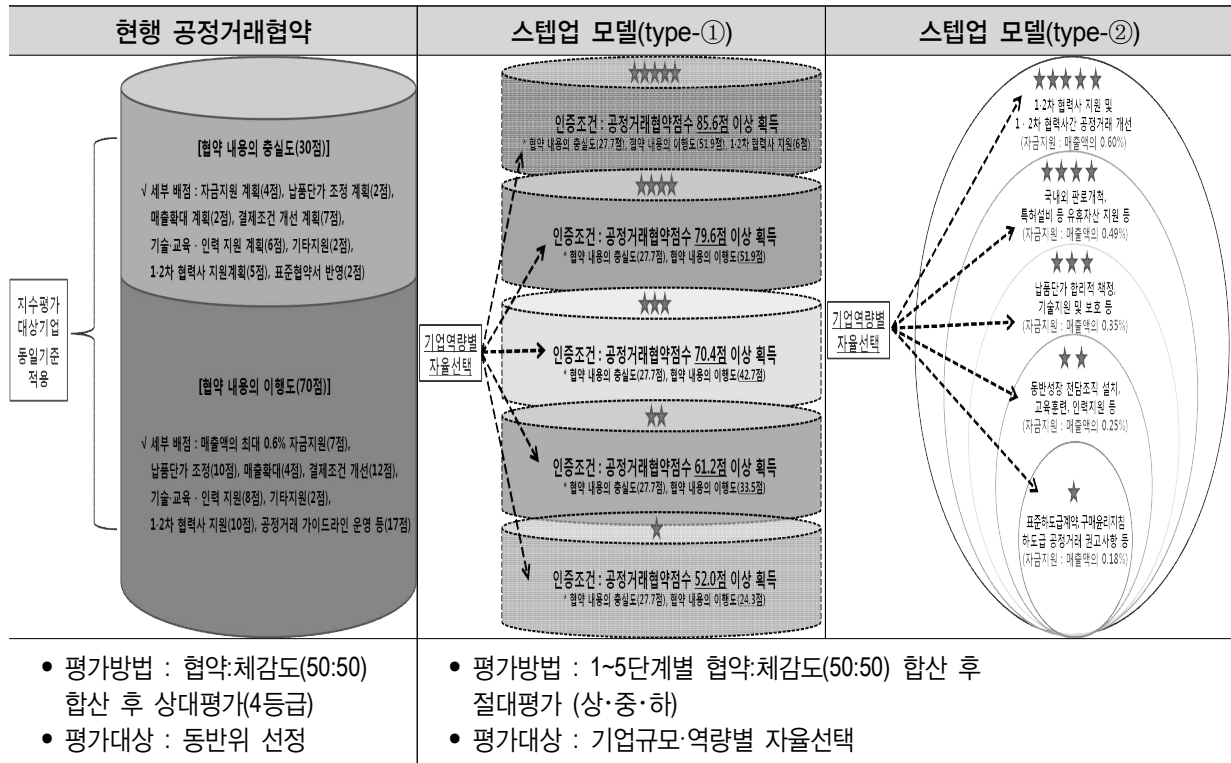
Ⅳ. 스텝업 방식의 동반성장지수 대안모델 정책제안

1.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평가부문 개선방안

- 현행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이하 ‘공정거래 협약’)의 평가기준과 평가방식은 초등학생과 대학생을 동일선상에 놓고 학력수준을 평가하는 구조와 유사함
 - 기업규모나 경영역량, 업종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기업들이 지수평가의 자발적 참여를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됨
- 이에 대기업, 중견·중소기업들이 기업규모나 업종에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안모델 개발
 - 협약평가항목의 구성과 이행난이도를 기업역량과 현실여건에 맞게 1~5단계로 차등설계하고, 기업이 당초 선택한 레벨의 절대평가기준을 이수할 경우, 동반성장 이행수준을 점차 상위레벨로 높여나가는 스텝-업(Step-Up)방식으로 보완
 - 스텝-업(Step-Up) 방식의 공정거래 협약모델은 기존의 평가항목을 활용하되, 평가항목별 이행난이도²⁾를 조사·분석하여 기업들이 경영수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평가받도록 설계
 - 이에 따라, 기업들은 각 사의 역량에 맞는 이행과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수평가 대상기업으로 참여하는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음
- 제도화 방안은 현행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1~5단계 모두에서 동일하게 활용하되, 각 등급에서 정한 최저점수 이상을 획득(절대평가)하면, 이행을 인증하는 방식(type-①)과 상위단계로 올라갈수록 평가항목과 이행난이도를 점차 높여나가되 각각의 단계별로 80% 이상을 이행하면 인증하는 방식(type-②)이 있음
 - type-①은 현행 협약 평가항목이 1~5단계 모두 평가기준으로 적용되나, 각 단계별 인증조건(최소 획득점수)을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설계한 모델임
 - 협약 평가기준으로 즉시 활용 가능한 모델로서 협약내용 충실도와 협약내용 이행도 분석결과에 따라 각 단계별 평가점수 인증조건(최소 획득점수)을 책정
 - type-②는 지수평가 대상기업을 대상으로 한 1~5단계별 평가기준에 대한 기업인식조사결과를 토대로 평가기준의 프레임을 새로 디자인하고, 이행난이도 조사결과와 정성적인 우선순위를 참조하여 평가기준을 각 레벨에 맞게 조정한 방식

2) 2013년 지수평가 대상기업 60개사(제조업종) 중 37개사 응답(응답률 61.7%)

<그림 3> 스텝-업(Step-Up) 방식의 공정거래협약모델(1~5단계) 예시



○ type-①, ②의 제도화 시 세부 평가기준은 각각 <표 2>, <표 3>과 같음

<표 2> 스텝-업(Step-Up) 방식의 공정거래협약 평가모델(type-①)

등급명칭	의미	평가방법
1스타(★)	참여적 동반성장 : 법적요구조건의 충족과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시작 단계	<div>□ 협약내용의 충실도(27.7점)</div> <div>- 적합도³⁾ 고려하여 27.7점 책정</div> <div>□ 협약내용의 이행도(24.3점)</div> <div>- 공정거래 이행수준(15.1점) ※ 이행난이도⁴⁾ 고려하여 15.1점 책정</div> <div>- 상생협력 이행수준(9.2점) ※ 이행난이도를 고려한 총점(36.8점)의 이행수준 25%에 해당하는 9.2점</div> <div>☞ 1스타(★) 인증조건 : 총점 52.0점 이상 획득</div>
2스타(★★)	지원적 동반성장 : 동반성장 지원틀 구축(교육훈련, 인력지원, 전담조직 등)	<div>□ 협약내용의 충실도(27.7점)</div> <div>- 적합도 고려하여 27.7점 책정</div> <div>□ 협약내용의 이행도(33.5점)</div> <div>- 공정거래 이행수준(15.1점) ※ 이행난이도 고려하여 15.1점 책정</div> <div>- 상생협력 이행수준(18.4점) ※ 이행난이도를 고려한 총점(36.8점)의 이행수준 50%에 해당하는 18.4점</div> <div>☞ 2스타(★★) 인증조건 : 총점 61.2점 이상 획득</div> <div>※ 평가점수가 52.0점 이상~61.2점 미만일 경우 1스타(★) 인증</div>

3) 적합도 반영방법 :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기에 적합성이 낮은 평가항목은 배점이 과도할 경우 합리적인 평가기준으로 활용될 수 없기 때문에 적합성이 5점 척도의 중간인 3점에 못 미치는 항목들은 보통(3점)과의 차이를 항목의 배점에서

3스타 (★★★)	신뢰적 동반성장 : 적극적 시스템 구축과 실천의지 반영	<input type="checkbox"/> 협약내용의 충실도(27.7점) - 적합도 고려하여 27.7점 책정 <input type="checkbox"/> 협약내용의 이행도(42.7점) - 공정거래 이행수준(15.1점) ※ 이행난이도 고려하여 15.1점 책정 - 상생협력 이행수준(27.6점) ※ 이행난이도를 고려한 총점(36.8점)의 이행 수준 75%에 해당하는 27.6점 ☞ 3스타(★★★) 인증조건 : 총점 70.4점 이상 획득 ※ 평가점수가 61.2점 이상~70.4점 미만일 경우 2스타(★★) 인증
4스타 (★★★★)	공유적 동반성장 : 상생성과 창출·공유	<input type="checkbox"/> 협약내용의 충실도(27.7점) - 적합도 고려하여 27.7점 책정 <input type="checkbox"/> 협약내용의 이행도(51.9점) - 공정거래 이행수준(15.1점) ※ 이행난이도 고려하여 15.1점 책정 - 상생협력 이행수준(36.8점) ※ 이행난이도를 고려한 총점(36.8점)의 이행 수준 100%에 해당하는 36.8점 ☞ 4스타(★★★★) 인증조건 : 총점 79.6점 이상 획득 ※ 평가점수가 70.4점 이상~79.6점 미만일 경우 3스타(★★★) 인증
5스타 (★★★★★)	완성적 동반성장 : 생산적 파트너십 확립과 생태계 경쟁력 강화	<input type="checkbox"/> 협약내용의 충실도(27.7점) - 적합도 고려하여 27.7점 책정 <input type="checkbox"/> 협약내용의 이행도(51.9점) - 공정거래 이행수준(15.1점) ※ 이행난이도 고려하여 15.1점 책정 - 상생협력 이행수준(36.8점) ※ 이행난이도를 고려한 총점(36.8점)의 이행 수준 100%에 해당하는 36.8점 <input type="checkbox"/>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 지원방안 이행도(6.0점) - 이행난이도를 고려한 총점 6.0점 ☞ 5스타(★★★★★) 인증조건 : 총점 85.6점 이상 획득 ※ 평가점수가 79.6점 이상~85.6점 미만일 경우 4스타(★★★★) 인증

<표 3> 스텝-업(Step-Up) 방식의 공정거래협약 평가모델(type-②)

등급명칭	의미	평가방법
1스타 (★)	참여적 동반성장 : 법적요구조건의 충족과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시작 단계	<input type="checkbox"/> 이행사항 : 하도급 3대 가이드라인 이행(협력사 선정·서면발급·계약체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금품수수 금지 등 구매윤리 제정·준수 <input type="checkbox"/> 이행강도 평가항목 : 매출액의 0.18% 자금지원, 35일내 대금지급, 현금성결제 75%의 달성도 평가 ☞ 1스타(★) 인증조건 : 총점(100점) 중 80점 이상 획득
2스타 (★★)	지원적 동반성장 : 동반성장 지원틀 구축(교육훈련, 인력지원, 전담조직 등)	<input type="checkbox"/> 이행사항 : 1스타 이행사항 + 교육·훈련지원, 인력·채용지원, 하도급거래 공정성 심의위원회 및 동반성장 전담조직 설치, 위탁정보 통보시스템 도입 <input type="checkbox"/> 이행강도 평가항목 : 매출액의 0.25% 자금지원, 28일내 대금지급, 현금성결제 85%의 달성도 평가 ☞ 2스타(★★) 인증조건 : 총점(100점) 중 80점 이상 획득 ※ 2스타(★★) 기준으로 평가 시 80점 미만일 경우 1스타(★) 기준으로 평가하여 80점 이상에 해당할 경우 1스타(★)로 인증

차감(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부록을 참조)

- 4) 이행난이도 반영방법 : 이행난이도가 지나치게 높아 기업이 목표달성에 이르기 어려운 항목은 배점이 과도할 경우 기업이 평가를 포기하게 하는 유인이 되기 때문에 이행난이도가 5점 척도의 중간인 3점을 초과하는 항목들은 보통(3점)과의 차이를 항목의 배점에서 차감(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부록을 참조)

3스타 (★★★)	신뢰적 동반성장 : 적극적 시스템 구축과 실천의지 반영	<p>□ 이행사항 : 2스타 이행사항 + 납품단가 조정, 기술지원·보호, 인사평가 시 동반성장 실적반영, 장기계약 또는 신규업체 발굴</p> <p>□ 이행강도 평가항목 : 매출액의 0.35% 자금지원, 21일내 대금지급, 현금결제 56%, 현금성결제 36%의 달성도 평가</p> <p>☞ 3스타(★★★) 인증조건 : 총점(100점) 중 80점 이상 획득</p> <p>※ 3스타(★★★) 기준으로 평가 시 80점 미만일 경우 2스타(★★) 기준으로 평가하여 80점 이상에 해당할 경우 2스타(★★)로 인증</p>
4스타 (★★★★)	공유적 동반성장 : 상생성과 창출·공유	<p>□ 이행사항 : 3스타 이행사항 + 협력사의 국내외 판로개척 등 매출확대 지원, 1·2차 협력사 간 협약체결 및 2차 협력사 애로개선, 특허·설비 등 유류 자산 지원</p> <p>□ 이행강도 평가항목 : 매출액의 0.49% 자금지원, 14일내 대금지급, 현금결제 71%, 현금성결제 29%의 달성도 평가</p> <p>☞ 4스타(★★★★) 인증조건 : 총점(100점) 중 80점 이상 획득</p> <p>※ 4스타(★★★★) 기준으로 평가 시 80점 미만일 경우 3스타(★★★) 기준으로 평가하여 80점 이상에 해당할 경우 3스타(★★★)로 인증</p>
5스타 (★★★★★)	완성적 동반성장 : 생산적 파트너십 확립과 생태계 경쟁력 강화	<p>□ 이행사항 : 4스타 이행사항 + 해외 동반진출 협력사에 납품단가·납품물량 우대 + 1·2차 협력사 간 납품단가·결제조건 개선 유도</p> <p>□ 이행강도 평가항목 : 매출액의 0.60% 자금지원, 10일내 대금지급, 현금결제 85%, 현금성결제 15%의 달성도 평가</p> <p>☞ 5스타(★★★★★) 인증조건 : 총점(100점) 중 80점 이상 획득</p> <p>※ 5스타(★★★★★) 기준으로 평가 시 80점 미만일 경우 4스타(★★★★) 기준으로 평가하여 80점 이상에 해당할 경우 4스타(★★★★)로 인증</p>

□ 스텝-업(Step-Up)모델이 기업의 역량을 고려하여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 가능한 모델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평가대상 선정, 이행등급 결정, 평가결과 활용의 개선도 요구됨

- 평가대상 선정방법 : 동반위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현행 평가기업 선정방식을 기업의 자발적인 신청방식으로 전환하고, 평가를 신청한 기업은 역량과 업종특성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이행단계(1스타~5스타)를 결정하는 프로세스로 진행해야 함
- 지수평가 대상기업이 대폭 증가할 경우 이에 따른 평가기관의 행정적·재정적 부담도 비례하여 늘어나게 되므로 아래와 같은 운영대책이 필요함
- 예컨대, 5스타 획득기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명예졸업제를 운영하여 평가기업의 감소를 유도하고, 평가기업이 인증료를 부담하여 평가에 소요되는 행정인력·예산을 조달함
- 단계적인 평가레벨 상향에 따라 최종적으로 5단계의 동반성장의 완성단계에 이르면 일정 기간(예시 2~3년간) 별도의 평가 없이 5단계의 인센티브를 제공함
- 이행등급 결정방법 : 기업들은 역량에 맞는 평가단계를 신청하여 이행평가를 받고, 이행을 인증 받은 기업들은 차년도 평가 시 상위단계 신청 또는 현행단계의 유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방식이 되어야 함

- 해당 기업이 도전한 등급의 인증기준에 평가점수가 못 미칠 경우 해당점수에 맞는 하위 등급으로 인증하되, 도전한 등급보다 상위단계 인증기준에 평가점수가 충족될 경우에는 도전등급으로 인증해야 함
- 이는 기업이 리스크 회피를 위해 각사의 역량에 맞거나 다소 높은 단계에 도전하지 않고, 일단 하위등급을 신청한 후,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
- 스타~5스타의 단계 중에서 한 번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이후에 당초 인증 받은 단계보다 낮은 등급의 평가를 신청할 수 없고 상향조정만 가능해야 함
- 다만, 매각, 합병, 워크아웃, 자본잠식 등 급격하게 경영여건이 악화한 기업은 예외로 하며, 위원회가 평가등급 하향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예외기준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 있음
- 또한, 각 단계별로 차이를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센티브 시스템이 개선될 경우, 기업은 상위단계의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니즈(Needs)가 커서 각사가 보유한 역량보다 낮은 하위단계를 신청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임
- 평가결과 활용방법 : 평가를 통해 당초 도전한 단계 또는 1단계 낮은 등급을 인증 받는 기업에 한하여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기업은 발표대상에서 제외 하되, 개별 컨설팅으로 개선을 유도해야 함
- 각 단계에 따라 <표 12>와 <표 13>과 같이 스타제도로 평가등급의 명칭을 부여하여 현재 우수-양호-보통-개선의 명칭에서 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해야 함
- 1~5단계의 등급별 명칭은 1단계=1스타(★), 2단계=2스타(★★), 3단계=3스타(★★★), 4단계=4스타(★★★★), 5단계=5스타(★★★★★)로 표기

2. 중소기업체감도 평가부문 개선방안

- 현행 중소기업 체감도는 범용기술업체(L형), 우선기술업체(A형), 핵심기술업체(J형) 등 협력사 역량별로 다양한 동반성장 투자수요(Needs)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이에 따라 대기업이 협력사의 어떤 부문을 지원하는데 주력해야 협력사 체감도가 향상되고, 경쟁력이 강화될지를 판단할 수가 없으므로 동반성장 효과성 제고를 위해 체감도 조사 시 협력사 역량별 니즈가 반영되어야 함

<표 4> 중소기업 역량과 특성에 따른 기업유형 세분화⁵⁾

L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기업(대기업)이 상세 설계도면 제공 • 낮은 R&D 수준 • Least Supplier Involvement
A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기업(대기업)이 개략적인도면과 사양 제시, 수탁기업(중소기업)이 상세 설계도면 완성 • 중간 R&D 수준 • More Supplier Involvement
J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기업(대기업)이 사양, 외관만 제시, 수탁기업이 나머지 상세 설계작업 모두 담당 • 높은 R&D 수준 • Early Supplier Involvement(ESI)

- 이를 위해, 중소 협력사의 역량별(L·A·J)로 대기업의 동반성장 지원투자 및 수요에 대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분석⁶⁾한 결과 역량별 니즈(Needs) 차이가 실제로 나타남
- 범용기술업체(L형)는 하도급법 준수(47.1%) 구매윤리(21.4%) 공동개발 및 판로개척 등 생산적 상생협력(12.9%) 順으로 중시
 - 우선기술업체(A형)는 하도급법 준수(38.5%), 구매윤리(19.0%), 상생협력 추진체계(17.8%) 順으로 중시
 - 핵심기술업체(J형)는 금융지원(30.8%)과 생산적 상생협력(23.1%), 구매윤리(16.9%) 順으로 중시

□ 협력사의 역량별 수요를 반영한 중소기업체감도 모델의 제도화 방안은 협력사 역량 판단설문을 추가하고, 역량별 니즈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실현 가능

5) 자료: 김기찬, “중소기업유형별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전략”, 2007.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6) 2013년 지수평가 대상기업 60개사(제조업중)의 1차 협력사 900개사 중 309개사 응답(응답률 34.3%)

- 이를 위해, 먼저 협력사의 역량별 집단(L·A·J) 구분은 <표 5>를 기준으로 체감도 조사 대상 기업이 어느 집단에 속하는지를 설문지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함
- 다만, 협력사 응답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표 5>의 보조설문을 통해 응답의 신뢰성을 검증하여 보조설문과 오차가 많은 기업은 집단을 재분류 절차를 거쳐야 함

<표 5> 협력사 역량별 집단(L·A·J) 판단기준

구분	L형	A형	J형
대기업에 납품하는 주요 제품	시장에서 구매 가능한 범용제품, 대기업의 설계도면에 따라 생산하는 단순 제조·조립품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생산할 수 있는 주문발주형 제품	기술력이 뛰어난 극소수 기업만 생산 가능한 핵심전략 제품
납품업체 선정과정	완전 경쟁입찰	소수 지명경쟁	수의계약
대기업과 관계	대기업이 언제든지 다른 납품업체로 전환 가능	대기업이 다른 납품업체로 전환 가능	대기업이 다른 납품업체로 전환이 매우 어려움

- 응답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보조설문은 <표 6>과 같고, 5개 설문 중에 가장 많은 응답이 속한 역량집단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음
- 또는, 협력사가 자기의 역량을 과대평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래 대기업이 해당 협력사의 역량을 평가하여 집단을 분류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음

<표 6> 협력사 역량별 집단(L·A·J) 판단기준의 보조지표

설문	L형	A형	J형
1 거래제품의 특성	범용기술, 표준품	우선기술(Middle-tech), 특정품	핵심전략부품
2 중소기업의 특성	노동집약적 단품생산	설계능력 부족 미래잠재력 보유	핵심기술력 보유
3 경쟁유형(일본)	다수 가격 경쟁형, 경쟁입찰	소수 기술 경쟁형	맞춤형 지명발주
4 중소기업의 핵심근로자	단순 기능 인력	숙련 기능 인력	고급 기술 인력
5 대기업 납품에 필요한 역량	원가경쟁력	품질·기술경쟁력	원천기술 개발 컨셉 제안 능력

- <표 7>의 협력사의 역량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표 8>의 방법으로 체감도 조사 시 협력사 역량별 응답결과에 대한 가중치 부여방식으로 동반성장 체감도 점수를 조정해야 함
- 장기적으로는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 거래 대기업과 해당 협력사간 양측의 협력수요를 조사하여 이의 결과에 따라 응답결과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법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표 7> 협력사 역량별 수요

평가항목	협력사 역량별 수요		
	L형	A형	J형
하도급 공정거래	47.1%	38.5%	16.9%
하도급거래행태	21.4%	19.0%	16.9%
금융지원	10.0%	17.8%	12.3%
상생협력활동	8.6%	14.9%	30.8%
상생협력 추진체계	12.9%	9.8%	23.1%
총계	100.0%	100.0%	100.0%

<표 8> 협력사 역량별 수요를 반영한 평가방법(A형 예시)

구분	현행 배점(a)	A형 협력사 수요(1순위)(b)	차이(a-b)	평가방법
공정거래	35점(%)	38.5%	-3.5%p	5점 척도 평가점수×0.035 가점
거래행태	15점(%)	19.0%	-4.0%p	5점 척도 평가점수×0.040 가점
금융지원	5점(%)	17.8%	-12.8%p	5점 척도 평가점수×0.128 가점
협력활동	30점(%)	14.9%	15.1%p	5점 척도 평가점수×0.151 감점
추진체계	15점(%)	9.8%	5.2%p	5점 척도 평가점수×0.052 감점

- 실제로, 협력사 역량을 반영하여 우선기술업체(A형)의 체감도를 산출할 경우, 하도급법 준수는 9.4점에서 13.0점으로, 구매윤리는 6.4점에서 7.6점으로, 상생협력 추진체계는 6.7점에서 7.3점으로, 금융지원은 2.8점에서 3.3점으로, 생산적 상생협력은 7.9점에서 9.1점으로 조정되어 체감도 총점이 42.3점에서 50.8점으로 20.1% 상향됨

□ 체감도 반영비율, 쌍방향평가, 체감도 조사대상 선정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함

- 정성평가인 중소기업 체감도는 대기업의 동반성장 추진수준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하기에는 신뢰성의 한계가 있으므로 보조 지표로만 활용하거나 지수평가의 반영비율을 10% 이내로 낮춰야 함
- 동반성장 파트너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소기업의 자구노력에 대한 대기업의 체감도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쌍방향 평가가 이뤄지도록 해야 함
-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대상은 거래 대기업이 공정거래협약 파트너로 선발한 협력사에 국한해야 함
- 그래야만 중소기업도 대기업의 지원 대상에 선정되기 위해 경영혁신의 노력에 주력하게 됨

3. 동반성장지수 인센티브 체계 개선방안

- 현행 지수는 기업의 동반성장 추진 노력이나 부담수준을 감안할 때,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의 실효성이 매우 취약
 - 따라서 동반성장 참여기업의 투입비용에 상응하여 산출성과가 극대화되도록 동반성장 단계별로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는 인센티브 시스템 개발이 필요
 - 특히, 중견·중소기업이 지수 평가에 참여할 경우 대기업에 비해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경영자원이 풍부하지 않아 체감하는 부담감이 더욱 큼
 -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이 지수 평가에 참여할 경우 수반되는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추진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체계가 마련된다면 동반성장이라는 목표를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높은 비용부담을 상쇄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임
 - 또한, 동반성장은 미래의 불확실한 성과이므로 지수 평가기업이 단기간에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보상을 제공해야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확산 가능
- 또한, 기업의 역량에 맞게 도전하는 스텝-업(Step-Up) 모델이 안정적으로 제도화되고, 산업생태계 전반에 동반성장을 확산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유인체계가 필요
 - 지수 평가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단계 상향을 유도하기 위해 지수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참여하여 평가등급을 획득한 기업은 투입노력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 받는 스텝-업(Step-Up) 방식의 인센티브 필요
- 이에, 기업의 자발적인 동반성장 참여 촉진에 효과적인 인센티브 도출을 위해 대·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수요를 조사·분석하여 스텝업 방식의 인센티브 체계를 개발
 - 1단계는 중견·중소기업의 참여유도에 효과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5단계로 올라갈수록 추진 노력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상위단계로 도전을 촉진하는 단계별 접근 방식(Step-Up)의 인센티브 시스템
 - 예컨대, 1~2단계에서 상위등급으로 인증 받게 되면,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 정책금융 대출 금리 우대, 기업신용 평가등급 상향 등 규모가 작은 기업에 필요한 인센티브가 부여됨
 - 5단계에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으면, 납품대금 현금결제 시 세액공제, 설비투자 세액공제, 공정위 조사면제 등 동반성장 추진비용을 상당부분 상쇄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방식임
 - 기업의 인센티브 수요와 기업의 동반성장 참여유인 제고를 위한 정성적 요인을 고려하여 설계한 단계별 접근방식의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방안은 <표 9>와 같음

<표 9> CSV형 상생협력 평가모델의 인센티브 시스템 디자인

1스타 (★)	2스타 (★★)	3스타 (★★★)	4스타 (★★★★)	5스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반성장 유공자 포상 가점 1점 ❖ 판매제품에 동반성장 인증 표기 ❖ 모범납세자 선정시 우대 (납세담보 한도 면제) ❖ 수출입은행, 무역보험 공사 금융지원 우대 ❖ 설비투자 세액공제(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반성장 유공자 포상 가점 2점 ❖ 판매제품에 동반성장 인증 표기 ❖ 모범납세자 선정시 우대 (납세담보 한도 면제) ❖ 수출입은행, 무역보험 공사 금융지원 우대 ❖ 설비투자 세액공제(4%) ❖ 기업신용 평가등급 1단계 상향 ❖ 납품대금 현금결제시 세액공제(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반성장 유공자 포상 가점 3점 ❖ 판매제품에 동반성장 인증 표기 ❖ 모범납세자 선정시 우대 (납세담보 한도 면제) ❖ 수출입은행, 무역보험 공사 금융지원 우대 ❖ 설비투자 세액공제(6%) ❖ 기업신용 평가등급 1단계 상향 ❖ 납품대금 현금결제시 세액공제(0.1%) ❖ 공공입찰시 우대 ❖ 정부 R&D과제 가점 ❖ 국내중견중소기업에서 구매한 원·부자재 세액공제(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반성장 유공자 포상 가점 4점 ❖ 판매제품에 동반성장 인증 표기 ❖ 모범납세자 선정시 우대 (납세담보 한도 면제) ❖ 수출입은행, 무역보험 공사 금융지원 우대 ❖ 설비투자 세액공제(8%) ❖ 기업신용 평가등급 1단계 상향 ❖ 납품대금 현금결제시 세액공제(0.2%) ❖ 공공입찰시 우대 ❖ 정부 R&D과제 가점 ❖ 국내중견중소기업에서 구매한 원·부자재 세액공제(0.1%) ❖ 공정위 서면실태조사 1년 면제 ❖ 세무조사 면제(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반성장 유공자 포상 가점 5점 ❖ 판매제품에 동반성장 인증 표기 ❖ 모범납세자 선정시 우대 (납세담보 한도 면제) ❖ 수출입은행, 무역보험 공사 금융지원 우대 ❖ 설비투자 세액공제(10%) ❖ 기업신용 평가등급 1단계 상향 ❖ 납품대금 현금결제시 세액공제(0.3%) ❖ 공공입찰시 우대 ❖ 정부 R&D과제 가점 ❖ 국내중견중소기업에서 구매한 원·부자재 세액공제(0.15%) ❖ 공정위 직권·서면실태 조사 1년 면제 ❖ 세무조사 면제(1회) 또는 명예기업 졸업

- 스텝업 방식의 인센티브 모델이 도입되면, 주요 대기업과 1차 협력사 10곳 중 3곳 이상은 지수평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밝혔고, 참여 안하겠다는 주요 대기업과 1차 협력사는 각각 5%, 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

□ 또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유인 제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단계별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과 함께 운영방식 개선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

- 현행 동반성장지수는 기업을 4개 등급으로 서열화하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상호 비교를 우려하여 평가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함
 - 특히, 평가결과가 언론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결과가 좋지 않은 기업은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동반성장에 소극적이라고 낙인찍히는 경우도 발생
 -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 경영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매각되지 않는 이상, 한번 지수평가 대상기업에 포함되면 제외되기도 어려워 평가에 대한 부담이 지속
- 따라서 세액공제와 행정조사 면제 등 동반성장 이행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동반성장지수와 스텝업(Step-up) 모델 등 동반성장 평가시스템의 운영방식을 <표 10>의 응답결과와 같이 개선하는 방법으로 기업의 참여유인 제고 가능

<표 10> 동반성장 평가시스템 운영방식의 참여유인에 대한 응답결과

구분		참여유인 매우 높다	참여유인 다소 높다	보통이다	참여유인 다소 없다	참여유인 전혀 없다
Pass/Non Pass의 절대평가 방식 도입	대기업	37.8%	37.8%	10.8%	13.5%	0.0%
	중소기업	20.1%	33.0%	39.0%	5.0%	2.8%
양호등급 이상 격년제 평가 실시	대기업	35.1%	35.1%	16.2%	10.8%	2.7%
	중소기업	18.9%	31.8%	41.2%	5.3%	2.8%
명예기업제 도입	대기업	21.6%	24.3%	35.1%	18.9%	0.0%
	중소기업	9.1%	26.1%	54.4%	6.0%	4.4%
신규편입 기업은 당해 평가결과 공개여부 선택	대기업	13.5%	35.1%	32.4%	16.2%	2.7%
	중소기업	12.9%	22.3%	55.3%	5.0%	3.5%

- 대·중소기업 모두에게 지수평가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유인이 가장 높은 운영방식은 ‘Pass/Non pass의 절대평가 도입’으로 조사
- 기업 간 비교를 통해 순위를 결정하는 상대평가 방식은 대체로 최근 경영실적이 우수하고, 자본금 규모가 큰 기업에 유리하기 때문임
- 따라서 경영성과가 부진하거나 역량이 취약한 기업은 동반성장 활동을 충실히 수행했음에도 다른 기업에 비해 동반성장에 소홀했다는 오명을 쓰게 됨
- 전년도에 평가결과가 좋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에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평가를 면제하는 ‘격년제 평가’와 ‘명예기업제’ 또한 참여유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현재 100여 개사의 지수평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거의 전 부처가 평가에 참여하는 등 평가에 소요되는 행정부담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나, 격년제 평가 및 명예기업제는 지수평가를 위한 행정비용을 크게 줄이고, 평가대상을 넓힐 수 있는 장점이 있음

4. 동반성장지수 시행효과 검증방안

- 동반성장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의 경쟁력을 높여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는데 있음
 - 본 센터가 학계·연구소 등 국내 동반성장 및 중소기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이명박 정부의 동반성장 성과평가 및 차기정부의 정책방향 인식조사」 결과, 전문가들의 절반가량(44.7%)이 차기정부의 동반성장 제1정책과제로 ‘대·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요구
 - 따라서 동반성장지수도 대·중소기업 모두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 창출에 동반성장의 궁극적인 목표(Output)를 설정해야 함
- 하지만, 지금까지는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과 소위 ‘3不’ 해소 등 대기업의 투입요소(Input)만 평가하여 지수 시행이후 정책목표(Output)가 얼마나 실현됐는지 측정 곤란
 - 특히, 대기업의 지원을 받은 협력사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점검시스템이 부재
 - 또한, 지수 시행효과 검증이 곤란하여 기업생태계 경쟁력 제고 등 지수 시행성과를 높이기 위한 보완과제 발굴이 어려움
 - 이에, 협력사의 R&D 투자액, 생산성, 수출역량 등의 지표로 경쟁력 변화를 측정하고, 취약점을 찾아, 동반성장 목표달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동반성장 평가기준과 운영 방식을 보완해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지수의 시행성과를 계량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기업생태계 건강성 종합지수’ 산출을 제도화 할 것을 제안함
 - ①협력사의 R&D투자액, 시장점유율 등 지수 시행 첫해의 각 지표값을 기준으로 설정
 - ② 이후부터는 매년 시행 첫해와 비교한 증감률에 따라 개별지표의 지수를 측정
 - ③ 개별지표 값을 합산한 평균점수로 기업 생태계 건강성 변화를 진단하는 방식임

<표 11> 기업생태계 건강성 종합지수 측정방법(예시)⁷⁾

구분	지표	측정기준	시행 1년차 측정치	시행 1년차 지수	시행 2년차 측정치	시행 2년차 지수	시행 3년차 측정치	시행 3년차 지수
선순환 생태계	강 건 성	협력사의 종업원 1인당 R&D 투자액	3,500만 원	100	3,700만 원	105.7	3,600만 원	102.8
		협력사의 종업원 1인당 특허 수	0.50	100	0.52	104	0.51	102

7) 예시의 측정치는 임의입력 수치임. 기업당 평균 동반성장 투자비용은 1년차 100억 원, 2년차 105억 원, 3년차 107억 원 가정

	혁신성	협력사의 종업원 1인당 신제품 매출비중	1억 원	100	1.1억 원	110	1.03억 원	103
		협력사의 종업원 1인당 수출비중	1.5억 원	100	1.7억 원	113.3	1.74억 원	116
	생산성	협력사의 종업원 1인당 매출액	2억 원	100	2.2억 원	110	2.3억 원	115
		자산순이익률(ROA)	12%	100	13%	108	13%	108
선순환 생태계 지수			100		108.5		107.8	
중소기업 전문화	전문성	협력사 총 매출액대비 주력 생산제품의 매출액 비중	50%	100	54%	108	54.7%	109.4
	차별성	협력사 주력제품의 시장점유율	15%	100	16%	106.6	16.3%	108.6
	선도성	협력사 주력 제품의 시장점유율 순위(세계 10위권 기업비중)	1.3%	100	1.4%	107.6	1.42%	109.2
중소기업 전문화 지수			100		107.4		109.0	
동반성장 투자가치	성장성	협력사의 매출액 증가율	11%	100	13%	118.1	13.7%	124.5
		협력사의 영업이익 증가율	5%	100	5.5%	110	5.9%	118
		협력사의 수출 증가율	7%	100	7.3%	104.2	7.5%	107.1
		협력사의 종업원 수 증가율	5%	100	5.2%	104	5.4%	108
	파트너십	지수평가기업의 국내외 원부자재 구매액 대비 국내 협력사의 납품액	45%	100	46.5%	103.3	46.8%	104
	투자효율	(성장성 지수+파트너십 지수 총계)÷기업당 평균 동반성장 투자비용*100	0.000005	100	0.0000051	102	0.0000052	104
동반성장 투자가치 지수			100		106.9		110.9	
기업생태계 건강성 종합지수			100		107.7		109.3	

V. 향후 추진계획

- 스텝-업(Step-Up) 모델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각 등급별 이행점수 등 실제 지수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실제 적용 가능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이를 위해 정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와 동반성장위원회,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주요기업과 학계(상생협력연구회)로 구성된 「동반성장지수 대안모델 TF」 운영 필요
 - TF가 지수평가 기업과 동반성장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스텝-업(Step-Up) 모델을 보완하고, 실제 지수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시뮬레이션 후 제도화 추진

<표 12> 향후 추진일정

일정	내용
8/20~8/30	동반성장지수 대안모델 TF 위원 선정
9/1~9/11	동반성장지수 대안모델 TF 사업계획 수립
9/14~9/30	스텝-업(Step-Up) 모델 보완과제 1차 발굴(업계 간담회 등)
10/1~10/15	스텝-업(Step-Up) 도입모델 확정
10/15~10/30	실제 지수평가결과 활용한 시뮬레이션
11/1~11/10	공청회 등 최종 의견수렴
11/15 전후	스텝-업(Step-Up) 평가모델 발표